

민주 “검찰, 정적 제거에 혈안… 당 차원 대응 신속 결정”

“사상 초유 야당대표 영장 청구, 군사정권도 하지 않은 일” 반발 지도부 “일치단결해서 가야”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내부 단속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회의 중에 영장청구 보도가 나왔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청구 요지를 보면 검찰은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것밖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도부와 상의해 향후 당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조속히 입장을 정

리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며 “군사정권도 하지 않은 일을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를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는 법무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더욱 열을 올렸다.

당내 이탈표가 쏟아지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가결 사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가결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만큼은 당이 일치단결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과감하고 담대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당내) 이탈표는 5표 이내로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그리고 지지층 내에서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는 시점에서 이 탈하는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비이재명(비명)계인 조용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 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하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에 흑사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들쭉날쭉한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조사”라면서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인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성일중 정책위 의장은 “정진형 민생을 원한다면 방탄 입법 독재를 멈추라. 죄가 없다면 정당하게 조사에 임하라”며 “반대표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 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이재명 영장청구 개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가운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민생 ✓안전 ✓외교 ✓안보 ✓인사

“李 신병 구속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김진표 의장,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선거제 개편 불가피”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해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선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 회기 중 검찰의 현역 의원 압수 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압수수색을) 회기 중에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해) 신임 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위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청문회 개최’ 공방

민주 “무성의한 검증, 청년들에게 대못” vs 국힘 “수용 어렵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면서 “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수많은 대학생과 청년에게 대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것 같다”면서 “논문 표절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혹 규명) 과정에서 교육

부와 대학이 너무 무성의하고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 김 여사의 2008년 논문 가운데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한 것이 논란이 되는 등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청문회는) 여당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김 여사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마치 무엇이 있는 양한

다”고 반박했다.

서병수 의원도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뤄진 일인데 교육위에 올려서 청문회를 하거나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 입시부정이 더 큰데도 국민의힘에선 청문회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서 “학력·논문 위주에 대해 건건이 청문회 하는 것은 전례에 맞지 않고 결국 정치공세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日 강제동원 직접 배상’ 의원 모임 출범

야당 의원 51명 정부안 반대 결의안 추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해 정부가 공식화한 ‘제3차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일본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16일 출범했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금을 조성해 징용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정사실로 했다”며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떠안는 건 해법이 아닌 굴욕”이라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빨리 끝내야

하는 과거사 정도로 여기며 ‘셀프배상’ 운운하니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른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운 해법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참석했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양 할머니는 “당시 목포·나주·광주·순천·여수 등 5개 도에서 138명이 동원됐다. 밥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일만 했다”며 “(한국에) 안 보내주면 (몸에) 빠져 죽는다고 하고 다짐을 받아 겨우 살아야 했다”고 회상했다.

모임은 정부가 마련한 해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축원룸(상가) 매매	상가매매(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충남 당진시 대산항, 화력발전소 5분 임대걱정없음</p> <p>▶ 월수익 → 750만 (년9,000만)</p> <p>시세 19억 급매 14억5천 (용7억)</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보3천, 월수익 380만)</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td> <td>▶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상가빌딩)</td> <td>▶ 감평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남구 사동 (토지)228평</td> <td>▶ 감평가 20억 → 최저가 20억</td> </tr> <tr> <td>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td> <td>▶ 감평가 16억 → 최저가 4억8천</td> </tr> <tr> <td>나주 봉화면 (과수원)</td> <td>▶ 감평가 5억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td> <td>▶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td> </tr> <tr> <td>장성 북이면 (잡종지)</td> <td>▶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td> <td>▶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able>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평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평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평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평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평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평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평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평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010-6670-9800		010-2614-9801																